

전북 대도약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도, 총 308건 3954억원 규모... 김관영 도지사, 중간보고회서 “선제 대응 등으로 미래 먹거리 예산 시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에 대해 진입합체 따라 현안 과제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95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308건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

도는 이날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신규사업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2027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3.1%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구상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첨단 기술 거점 구축에 집중했다. 주요 사업으로 이차전지 전주 AI 기반 분석센터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는 맞춤형 메디컬푸드 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중간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발 및 상용화,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새만금 및 SOC 분야는 전북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사업별로는 새만금 하수통합방류관로 구축사업, 전라선 고속화, 백제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홍보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립 관소리 신업 복합단지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발굴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중앙부처 방문 설명에 집중하는 한편, 부처별 예산 지출현도액이 배정되는 3월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은 부처안 편성 전까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전북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문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원

내대표로, 이성운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당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기회로 평가된다. 도는 이를 국정 설득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현안 과제 해결 및 국비 확보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든 말하더라도 전 직원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중앙부처와 기호 예산처를 향해 발품 행정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의 회복, 국가 정상화”

민주 이성운 최고위원

“전북이 회복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입니다. 저를 마음껏 활용해 주십시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당히 2위로 당선된 이성운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임에도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고향 언론인들 앞에 선 그는 가장 먼저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신 도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사명감이라는 단어로 압축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다도 전북만큼 아프고 힘든 곳이 없다”며 “전북을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라 지칭했다.”

검사 시절의 차가운 이성보다는, 고향의 낙후된 현실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그는 “전주에 오면 한없이 낮아져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용산역에 내리는 순간 다시 기가 살아난다”며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의 일임으로서 전북의 목소리를 결연하고 당당하게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뜻이 어디가 없었는지 공개했다.

이 의원은 특히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당내 조직표와 할 수 있는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과 국’의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위원들은 저를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권리당원들께서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 같다”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을 누비며 하루에 1,000km씩 달렸던 자신의 간절함이 통했다”고 회상했다.

조직의 논리보다는 민심의 파도를 타고 지도부에 임명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의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 의원은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새만금 문제와 최근 급부상한 충청권·호남권의 통합(메가시티) 논의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최고위원과 전북 연구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북의 발전과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전북 발전과 회복’을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용인 반도체 리스크 임계점... 전북 포함 남부권 4극 벨트로”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북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방 분산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면한 전력 과잉 공급 부족 문제를 ‘국가적 리스크’로 규정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그 구조적 한계를 경고해 온 만큼 수도권 집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SK의 랩 7기를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입지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안선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북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방 분산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필요한 삼성전자 등 기업들에게 전북이 3~4년 내 가동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입지 조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상에 전북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주·광주·부산구미를 잇는 4극 체제로 확

대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전주는 이미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탄소(SiC)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상용차·농기계·로봇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 역할을 한다면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계를 담당해 남부권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용인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정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으로서 전력·용수 공급부터 세계 지원, 정부 여건까지 포함된 ‘중략 패키지’를 마련해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무늬만 지방이전, 이제는 ‘NO’

민주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3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과 인체 채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러한 지역발전 기여도가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에 소극적이라는 이른바 ‘무늬만 지방이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 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공헌과 인재 채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음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낙후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지역 상생을 부가 업무로 치부하게 만든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익산시장 사법 살인,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 박경철 전 시장, 정부·국회에 도입 촉구

박경철 전 익산시장(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자신의 시장직 상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지역 국회의원의 재판거래에 의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 제2 도시이자 호남 3대 도시인 익산의 수장을 사법적으로 살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역사와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행정처의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행정처 문건 제117번에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을 설득할



박경철 전 익산시장(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략 포인트’로 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며 “재판 진행을 고의로 늦추거나 무기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겉으로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의원들을 동

원해 대법원 판결을 앞당겨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며 “이는 성경 속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에 비견될 만한 현정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현재의 사법부 상황과 연결 지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언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살인 시도”라며 “이러한 행태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주동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된 이춘석 의원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 5만 2,000여표를 던져준 익산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선적 위자료 배상

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출범, KTX 익산역 환승역차량 개통 등 3대 황금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호 세력과 사비 기자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파멸적인 공직자로 몰렸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시장에서 물러난 직후 자택에서 금당어리와 현금통치가 발견되었다는 등 익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했다”며 “동학혁명 발상지이자 가인 김영호 선생을 배출한 전북에서 사법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익산시장은 익산에서 최초로 무소속으로 민선 7기 익산시장에 당선돼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재임했으나 선거법 위반죄로 낙마했다.

/오만호 기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참여 선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절차 전적으로 존중”



차기 전북교육감 출구 선거에 나선 천호성 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천 교수는 13일 논평을 통해 “교육 대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이하 전북교개혁위)를 중심으로 ‘교개혁’을 추진하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 과정에 책

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교개혁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전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나섰으나 약 3% 차이로 석패했던 천 교수는 “지난 시간 동안 익산시장 후보로 당시 지지자들의 열망을 잊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반드시 다시 한번 단일후보로 추대되어 도민과 함께 전북교육의 혁신을 그려내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오만호 기자